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September, 2021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법률 뉴스

01.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02. 최고법: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기준 조정
03. 교육부: 기존 온라인 학과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을 심사비준으로 변경
04. 세관총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반품센터창고방식 전면 보급
05. 교통부: 공평한 시장질서 유지, 모바일 콜택시 규범화 추진
06. 국무원, 자유무역구 무역투자 편리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데 관한 조치 인쇄·발행

2.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 시행에 관한 통지
02.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기준의 조정에 관한 통지>
03. <기존 온라인 학과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备案)을 심사비준(审批)으로 변경하는데 관한 통지>
04.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반품센터창고방식 전면 보급에 관한 공고>
05. <공평한 시장질서의 유지 및 모바일 콜택시의 규범화 추진에 관한 통지>
06.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투자 편리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데 관한 조치>

3. 지역중요뉴스

01. 웨강아오 다완취의 '크로스보더 재테크통' 정식 출범
02. 하이난 자유무역항 창업투자 신규 규정 출범

4. 노동법문답

Q: 고용단위는 매달 초과 근무시간이 36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일주일동안 하루 4 시간의 근무시간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1. 법률 뉴스

01.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출처: 건강시보

[내용개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의 시행 사항에 관한 공지(이하, <공지>)를 발표하였다. <방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등록 신청항목에 대한 처리, 보완자료와 관련된 검사보고서, 새로운 강제성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신청항목에 대한 심사 접수 등 7개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공지>의 규정에 따르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접수하였지만 아직 심사 결정을 내리지 않은 등록 신청항목에 대하여 약품감독부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심사하고 비준하며,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기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医疗器械注册与备案管理办法》自 2021 年 10 月 1 日起施行。一些诊断或者治疗罕见病、恶性肿瘤、老年人特有和多发疾病以及专门用于儿童的医疗器械，临床急需的医疗器械，国家将进行优先审批，让更多的患者及时治疗。

《办法》总结近年来医疗器械审评审批改革成果，增设特殊注册程序专章，将创新产品注册程序、优先注册程序、应急注册程序等特殊注册程序纳入其中，并明确了各通道的纳入范围、程序、支持政策等。

《办法》规定了医疗器械应急注册程序，明确国家药监局可以依法对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所需且在我国境内尚无同类产品上市，或者虽在我国境内已有同类产品上市但产品供应不能满足突发公共卫生事件应急处理需要的医疗器械实施应急注册。

《医疗器械注册与备案管理办法》和《体外诊断试剂注册与备案管理办法》是《医疗器械

监督管理条例》的配套执行文件，是对注册备案管理制度的完善和细化。陈红彦指出：“明确鼓励医疗器械研发创新，对临床急需医疗器械实行优先审批，对创新医疗器械实行特别审批，缩短产品上市周期，激发行业创新动力，有效推动医疗器械产业高质量发展。”

国家药监局医疗器械注册司稽查专员王兰明在接受健康时报记者采访时说，将拓展性临床试验纳入其中，规定对正在开展临床试验的用于治疗严重危及生命且尚无有效治疗手段的疾病的医疗器械，经医学观察可能使患者获益，经伦理审查、知情同意后，可以在开展医疗器械临床试验的机构内免费用于其他病情相同的患者，其安全性数据可以用于医疗器械注册申请。

陈红彦补充，“这将有利于临床诊断治疗罕见疾病我严重危及生命且尚无有效治疗手段的疾病，以及应对公共卫生事件时急需的临床医疗器械。随着我国社会 and 科技发展、疾病诊疗水平和人们生活水平不断的提高，越来越多具有突破性和创新性的医疗器械涌现，以满足恶性肿瘤、老年、儿童等多样化的疾病诊疗需求，保障人民健康。”

02. 최고법: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기준 조정

출처: 양성석간

[내용개요: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기준의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포하였고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는 “1. 중급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住所地)가 법원이 소재하는 성급 행정관할구역에 모두 있거나 또는 모두 없는 소송 목적물의 금액이 5 억 위안 이상인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2. 중급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거주지가 법원이 소재하는 성급 행정관할구역에 없는 소송 목적물의 금액이 1 억 위안 이상인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3. 전역군사법원(战区军事法院)과 총직속군사법원(总直属军事法院)은 소송 목적물의 금액이 1 억 위안 이상인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最高人民法院 9 月 23 日印发《最高人民法院关于调整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民事案件标准的通知》(以下简称《通知》), 大幅调高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民事案件受案起点金额。《通知》自 2021 年 10 月 1 日起实施。

《通知》指出, 为适应新时代经济社会发展和民事诉讼需要, 准确适用民事诉讼法关于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民事案件的规定, 合理定位四级法院民事审判职能, 现就调整中级人民法院管辖第一审民事案件标准问题作出《通知》。

《通知》明确: “当事人住所地均在或者均不在受理法院所处省级行政辖区的, 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 5 亿元以上的第一审民事案件。”

《通知》明确: “当事人一方住所地不在受理法院所处省级行政辖区的, 中级人民法院管辖诉讼标的额 1 亿元以上的第一审民事案件。” “战区军事法院、总直属军事法院管辖诉讼标的额 1 亿元以上的第一审民事案件。”

根据《通知》的规定: “对新类型、疑难复杂或者具有普遍法律适用指导意义的案件, 可

以依照民事诉讼法第三十八条的规定，由上级人民法院决定由其审理，或者根据下级人民法院报请决定由其审理。”

《通知》指出：“本通知调整的级别管辖标准不适用于知识产权案件、海事海商案件和涉外涉港澳台民商事案件。”“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关于中级人民法院第一审民事案件级别管辖标准的规定，与本通知不一致的，不再适用。”

03. 교육부: 기존 온라인 학과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을 심사비준으로 변경

출처: 양광넷

[내용개요: 교육부 반공청 등 6 개 부문은 연합하여 <기존 온라인 학과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备案)을 심사비준(审批)으로 변경하는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는 전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심사비준제도의 시행과 허가증명서의 발급, 증명서와 허가증서의 신청과 수령, 정보의 업데이트를 더 규범화하고 ‘쌍감소’(双减)문서를 발표하기 전에 <교육부 등 6 개 부서의 교외 온라인 교육기관을 규범하는 데 관한 실시의견>에 따라 이미 등록(备案)된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과별 교육기관에 대해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온라인 기관 심사비준 설치의 기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성급 교육행정부서에서 통일된 설치요구에 따라 온라인 기관에 대해 심사비준을 실시하며, 심사비준이 통과되면 학교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동급 민정부서 또는 시장감독부서에 각각 비영리 또는 영리법인으로 등록한다고 하였다.]

近日，为贯彻落实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的《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以下简称“双减”文件），教育部会同中央网信办、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民政部、市场监管总局印发通知，就做好现有线上学科类培训机构由备案改为审批工作进行部署。

通知强调，坚持依法依规，按照《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及其实施条例，对线上机构实施审批，确保证照齐全、规范运营。坚持严格审批，不符合条件的不予发放办学许可证，未经许可不得以任何线上方式从事有偿性学科类培训。坚持协同治理，加强部门协调分工，简化工作程序。2021 年底前完成对已备案线上学科类培训机构的审批工作，并同步建立相应的监督管理制度，在依法获得办学许可证及相关证照前，现有线上机构应暂停新的招生及收费行为。

通知明确，对于“双减”文件印发前，按《教育部等六部门关于规范校外线上培训的实施意见》（教基函〔2019〕8 号）已备案的、面向中小学生的线上学科类培训机构实施审批制

度。教育部会同相关部门明确线上机构审批设置基本要求，由省级教育行政部门按统一的设置要求，对线上机构实施审批，审批通过后发放办学许可证，并在同级民政或市场监管部门分别登记为非营利性或营利性法人。面向义务教育阶段学生的学科类线上培训机构，一律登记为非营利性法人。

通知要求，各地要统筹校外线下和线上培训规范治理工作，建立教育部门牵头、有关部门参与的协同工作机制，妥善制订详细的工作方案和应急预案，并建立健全常态化的管理和监督制度。教育行政部门牵头组织校外线上培训的综合治理，公开投诉举报方式，联合相关部门现有执法队伍开展网络巡查和综合执法；网信、公安、电信部门要做好违规培训平台和应用软件（含 APP）的关停、下架等工作。各地要建立健全问责机制，将线上学科类培训机构审批工作纳入督查范畴，对责任不落实、措施不到位的相关单位及责任人严肃问责，确保工作按期完成。

04. 세관총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반품센터창고방식 전면 보급

출처:세관총서

[내용개요: 세관총서는 2021년 제 70호 공고를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반품센터창고방식을 전면 보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공고는 “반품센터창고방식”의 정의에 기초하여 해당 내용은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인터넷구매 보세 소매수입(감독방식코드: 1210) 상품의 반품에 적용한다고 하였다. 공고는 반품센터창고의 설치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반품관리업무를 진행하는 반품센터창고 업체의 세관신용등급이 신용불량업체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또한 반품센터창고 업체는 반품절차 모니터링 시스템, 상품근원추적 시스템과 기타 관련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2021년 9월, 海关总署发布 2021 年第 70 号公告（关于全面推广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退货中心仓模式的公告），自 2021 年 9 月 10 日起，全面推广“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退货中心仓模式”（以下简称退货中心仓模式）。相关政策解读如下：

一、什么是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退货中心仓模式

退货中心仓模式是指在跨境电商零售进口模式下，跨境电商企业境内代理人或其委托的海关特殊监管区域内仓储企业（以下简称退货中心仓企业）可在海关特殊监管区域内设置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退货专用存储地点，将退货商品的接收、分拣等流程在原海关特殊监管区域内开展的海关监管制度。

二、为何要全面复制推广

通过对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退货中心仓模式试点情况的总结，试点海关反映此项改革有利于规范跨境电商零售进口退货监管，试点企业表示退货中心仓模式实现了运营成本集约化，减轻了企业资金和人力成本负担。2020 年，退货中心仓模式被纳入国务院发布的《国务院关

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六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国函〔2020〕96号）37项改革试点之一。今年，海关总署党委将全面复制推广退货中心仓模式确定为“我为群众办实事”实践活动重点民生项目，助力减轻企业负担，促进跨境电商零售进口业务规范健康持续发展。

三、适用范围

退货中心仓模式适用于海关特殊监管区域内开展的跨境电子商务网购保税零售进口（监管方式代码1210）商品的退货。

四、业务开展条件

（一）企业资质要求

申请设置退货中心仓并据此开展退货管理业务的退货中心仓企业，其海关信用等级不得为失信企业。

（二）相关软硬件要求

退货中心仓企业开展退货业务时，应划定专门区位，配备与海关联网视频监控系统，使用计算机仓储管理系统（WMS）对退货中心仓内商品的分拣、理货等作业进行信息化管理，并按照海关规定的方式与海关信息化监管系统联网，向海关报送能够满足监管要求的相关数据，接受海关监管。

（三）内控制度要求

退货中心仓企业应当建立退货流程监控体系、商品溯源体系和相关管理制度，保证退货商品为原出区域商品，向海关如实申报，接受海关监管，并承担相应法律责任。退货中心仓企业应注重安全生产，做好退货风险防控，从退货揽收、卡口入区域、消费者管理等方面完善管理制度，规范操作，遵守区域管理制度并配合海关强化对退货中心仓内商品的实货监管。

05. 교통부: 공평한 시장질서 유지, 모바일 콜택시 규범화 추진

출처: CCTV 넷

[내용개요: 교통운송부 반공청은 <공평한 시장질서의 유지 및 모바일 콜택시의 규범화 추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각 지역의 교통운송 주관부서는 모바일 콜택시 플랫폼 회사가 적법하게 경영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불합격 차량과 운전자를 신규로 접속해서는 아니되며, 불합격한 운전자와 차량의 퇴거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바일 콜택시의 규범화한 작업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치를 세분화하며, 규범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통지>에서 각 지역의 교통운송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두개의 무작위검사(双随机检查)업무 강도를 높여야 하며, 통일 개방과 경쟁 질서가 있는 시장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交通运输部印发《关于维护公平竞争市场秩序加快推进网约车合规化的通知》，进一步维护公平竞争市场秩序，加快推进网约车合规化进程，促进网约车行业规范健康持续发展。

《通知》指出，近期，部分网约车平台公司招募或诱导未取得许可的驾驶员和车辆“带车加盟”，开展非法营运，严重扰乱公平竞争的市场秩序，影响行业安全稳定。各地交通运输主管部门要进一步提高政治站位，充分认识网约车合规化对维护公平竞争市场环境的重要意义，并压紧压实企业依法依规经营主体责任，积极推进市场主体多元化，为各类市场主体创造广阔的发展空间，更好地服务人民群众安全便捷出行需求。

《通知》要求，各地交通运输主管部门要督促网约车平台公司依法依规开展经营活动，加快网约车合规化进程。即日起，不得新接入不合规车辆和驾驶员，并加快清退不合规的驾驶员和车辆。要加强监管执法，严格规范执法行为，综合运用线上线下等各种手段，加大对网约车非法营运的打击力度，持续保持高压态势。对仍新接入不合规车辆和驾驶员的网约车平台公司，要依法依规查处，并将有关情况报至交通运输部。同时，要制定网约车合规化工作方案，明确目

标，细化举措，切实推进合规化工作，并坚持监管规范和促进发展两手并重，优化审批流程，强化服务，坚决破除许可办理的“玻璃门”“旋转门”等现象，为符合准入条件的网约车平台公司、车辆及驾驶员办理许可提供便利。

《通知》强调，各地交通运输主管部门要督促企业落实主体责任，强化企业公平竞争意识，引导形成崇尚、保护和促进公平竞争的市场环境。要会同相关部门加快建立全方位、多层次、立体化监管体系，加强对网约车平台公司的事前事中事后全链条全领域监管，提高监管效能。要配合相关部门加大双随机检查工作力度，依法严厉查处低价倾销、大数据杀熟、诱导欺诈等违法违规行为，推动形成统一开放、竞争有序的市场体系，切实维护公平竞争的市场秩序。

《通知》明确，各地交通运输主管部门要积极会同有关部门指导督促网约车平台公司依法合规用工，科学制定平台派单规则，规范定价行为，完善利益分配机制，降低过高的抽成比例，保障驾驶员获得合理劳动报酬和休息时间，并充分发挥 12328 交通运输服务监督电话作用，及时处理驾驶员和乘客对平台经营行为的投诉。同时，要加强对市场运行情况的动态监测，及时排查化解各类矛盾纠纷和风险隐患，确保行业稳定，并督促网约车平台企业加强对网约车驾驶员的安全教育，提升行业运营安全水平。

据悉，从 2021 年 9 月起，交通运输部将每月公布 36 个中心城市网约车合规率情况。对因许可办理拖延等问题导致符合条件的车辆和驾驶员未能合规化的城市，交通运输部将向社会公开城市名单。

06. 국무원, 자유무역구 무역투자 편리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데 관한 조치 인쇄·발행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무역투자 편리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데 관한 조치>(이하, <조치>라 함)를 인쇄·발행하였다. <조치>는 5 개 방면의 특징이 있는 19 개 조치를 제기하였다. 첫째, 무역의 편리도를 제고한다. 둘째, 투자의 편리도를 높인다. 셋째, 국제물류의 편리도를 향상한다. 넷째,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편리도를 향상한다. 다섯째, 무역투자편의에 대한 사법의 보장기능을 모색한다. 그중에서 <조치>에 따라 홍콩·마카오에 대한 투자 개방 강도를 높이고 홍콩·마카오 서비스 공급자가 자유무역시험구에 투자하여 여행사를 설립하는 심사 비준권한을 성급 관광주관부서에서 자유무역시험구에 이관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제등록선박에 대한 법정검사를 자유화하고 법에 의해 비준을 받은 해외선박검사기구가 자유무역시험구 국제등록선박에 대해 법정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国务院 3 日发布《关于推进自由贸易试验区贸易投资便利化改革创新若干措施》。商务部副部长兼国际贸易谈判副代表王受文表示，措施赋予自贸试验区在贸易投资便利化方面更大的改革自主权，有针对性地提出 19 项措施，推动自贸试验区更好发挥改革开放排头兵的示范引领作用。

王受文 3 日在国新办举行的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上表示，措施提升贸易便利度。开展贸易进口创新，支持自贸试验区所在地培育进口贸易促进创新示范区；释放新型贸易方式潜力，支持自贸试验区发展离岸贸易；推进“两头在外”保税维修业务，支持自贸试验区内企业按照综合保税区维修产品目录开展保税维修业务；提升医药产品进口便利度，允许具备条件的自贸试验区开展跨境电商零售进口部分药品及医疗器械业务。

在提升投资便利度方面，措施加大对港澳投资开放力度，将港澳服务提供者在自贸试验区投资设立旅行社的审批权限，由省级旅游主管部门下放到自贸试验区。同时，放开国际登记船舶法定检验，允许依法获批的境外船舶检验机构对自贸试验区内国际登记船舶开展法定检验。







在自贸试验区实行产业链供地，对产业链关键环节、核心项目涉及的多宗土地实行整体供应。

在提升国际物流便利度方面，措施支持自贸试验区所在城市的国际机场利用第五航权，在平等互利的基础上允许外国航空公司承载该城市至第三国的客货业务。支持自贸试验区试点多式联运“一单制”改革，鼓励自贸试验区制定并推行标准化多式联运单证，研究出台铁路运输单证融资政策文件。

在提升金融服务实体经济便利度方面，针对期货交易，措施提出进一步丰富商品期货品种，加快引入境外交易者参与期货交易，完善期货保税交割监管政策。开展本外币合一银行账户体系试点。推进融资租赁公司外债便利化试点。在符合条件的自贸试验区规范探索知识产权证券化模式。

此外，措施还探索司法对贸易投资便利的保障功能。提出完善仲裁司法审查，明确对境外仲裁机构在自贸试验区设立的仲裁业务机构作出的仲裁裁决进行司法审查所涉及的法律适用问题。

2.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 시행에 관한 통지 
02. <중급인민법원 제 1 심 민사사건 관할기준의 조정에 관한 통지> 
03. <기존 온라인 학과 교육기관에 대한 등록(备案)을 심사비준(审批)으로 변경하는데 관한 통지> 
04.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반품센터창고방식 전면 보급에 관한 공고> 
05. <공평한 시장질서의 유지 및 모바일 콜택시의 규범화 추진에 관한 통지> 
06.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투자 편리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데 관한 조치> 

3. 지역중요뉴스

01. 웨강아오 다완취의 '크로스보더 재테크통' 정식 출범

출처: 양광망

[내용개요: 중국인민은행 광저우 분행 등 6 개 부서는 공동으로 <웨강아오 다완취의 '크로스보더 재테크통' 업무시범 실시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하였으며, 발표일로부터 3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였다. <세칙>에 의하면, '크로스보더 재테크통'의 업무에는 '북향통'과 '남향통'이 포함되며, 홍콩·마카오 투자자와 다완취의 중국 투자자는 현지 은행을 통해 국경을 넘어 상대방 은행이 판매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세칙>에서 '크로스보더 재테크통'은 남북방향으로 동시에 개방되며, 시범이 실시되면 홍콩·마카오의 투자자와 중국 현지의 투자자들은 모두 크로스보더 투자상품과 펀드 상품을 공모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크로스보더 재테크통'은 개인투자업무의 혁신을 실현하였다고 명확히 하였다.]

《粤港澳大湾区“跨境理财通”业务试点实施细则》（下称“实施细则”）正式发布，拉开了粤港澳大湾区居民个人跨境购买理财产品的序幕。

根据《实施细则》，“跨境理财通”业务是指大湾区内地和香港合资格居民通过双方司法管辖区的银行体系建立的闭环式资金管道，投资对方银行销售的理财产品。

“跨境理财通”业务包含“北向通”和“南向通”。中国人民银行广州分行党委委员、副行长苏贇表示：“‘跨境理财通’南北向开放，试点一经推行，港澳投资者均可享受购买跨境投资理财产品和公募基金产品的便利。”

其中，“南向通”指内地合资格居民通过指定管道投资香港银行销售的理财产品，当中资金跨境划转主要由内地银行负责，理财产品的销售由香港银行负责；而“北向通”指香港合资格居民通过指定管道投资内地银行销售的理财产品，当中资金跨境划转主要由香港银行负责，

内地理财产品的销售由内地银行负责。

值得注意的是，“南向通”和“北向通”的总额度均暂定为 1500 亿元人民币，每名投资者个人额度为 100 万元人民币。

苏贇指出，作为资本项下人民币跨境使用的又一次探索，“跨境理财通”实现了个人投资业务的创新。在资金跨境汇划环节，涉及的资金均使用人民币跨境结算，资金兑换在离岸市场完成。“该举措进一步丰富了人民币境外使用场景，推动人民币国际化纵深发展。”

为最大限度提高投资者业务办理效率，“跨境理财通”支持线上签约、代理见证客户、线上风险测评、远程购买产品，基本能够实现全流程远程办理。

此外，《实施细则》中规定了投资产品范围及中、低风险等级、投资者资质、试点银行业务资格等内容，通过设置“门槛”确保试点业务有序开展，从制度设计上保护投资者。

02. 하이난 자유무역항 창업투자 신규 규정 출범

출처: CCTV 뉴스넷

[내용개요:海南省 발전개혁위원회는 여러 부문과 공동으로 <해남자유무역항 창업투자업무가이드(2021년판)>(이하, <업무가이드>)를 출범하여 창업투자 서비스관리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보완함으로써 창업투자업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업무가이드>는 국가는 창업투자기업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창업투자기업이 발전개혁부서에서의 등록조건, 투자운영, 감독관리방식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하이난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발표하였다. 우대정책에는 세수우대정책, 자유무역항 발전보너스, 신속한 상사등록, 충분한 부대정책 등 4가지 종류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近日，海南省发展改革委同多部门联合出台《海南自由贸易港创业投资工作指引（2021年版）》（下称《工作指引》），进一步规范和完善创业投资服务管理工作，促进创业投资行业持续健康发展。

《工作指引》明确，创业投资是指向处于创建或重建过程中的未上市成长性创业企业进行股权投资，以期所投资创业企业发育成熟或相对成熟后，主要通过股权转让获取资本增值收益的投资方式。创业投资企业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注册设立的主要从事创业投资的企业组织。创业企业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注册设立的处于创建或重建过程中的成长性企业，但不含已经在公开市场上市的企业。

《工作指引》明确，国家对创业投资企业实行备案管理。创业投资企业的备案管理部门分国务院管理部门和省级（含副省级城市）管理部门两级。国务院管理部门为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海南省管理部门为海南省发展和改革委员会。创业投资基金则需在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以下简称“中基协”）备案，完成中基协备案后可在海南省发展和改革委员会备案。

《工作指引》明确了创投企业在发展改革部门备案条件、投资运作、监管方式等，并公布

海南创业投资企业的优惠政策，优惠政策具体包括税收优惠政策、自贸港发展红利、快捷的商事登记、充足的配套政策四大类。

《工作指引》明确，目前，对于在海南自由贸易港设立并满足条件的创业投资企业，一是可以按投资于中小高新技术企业、初创科技型企业投资额的 70% 抵扣应纳税所得额，二是可以享受海南自贸港鼓励类产业减按 15% 征收企业所得税优惠；符合条件的创业投资从业人员，来源于海南自由贸易港的综合所得、经营所得以及经海南省认定的人才补贴性所得可享受个人所得税实际税负超过 15% 部分予以免征的优惠政策。同时，海南自由贸易港持续推进企业开办“减材料、减环节、减时间、减费用”。目前，企业可自主通过“海南 e 登记”平台进行登记注册，开办企业时间年底前压缩至 1 个工作日。

4. 노동법문답

Q: 고용단위는 매달 초과 근무시간이 36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일주일동안 하루 4 시간의 근무시간 증가를 요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요구할 수 없다. 표준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40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만일 단위에서 생산, 경영의 수요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하루에 3 시간, 한달에 36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루 및 한달의 연장 근무시간은 고용단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범위내에서 있어야 한다. 만약 한달에 36 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하루의 연장근무시간이 3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는 연장근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용단위는 제때에 연장근무방안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범무법인[유] 지평